

OECD 국가 중 국내물가가 높은 이유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 연구위원

limhj9@h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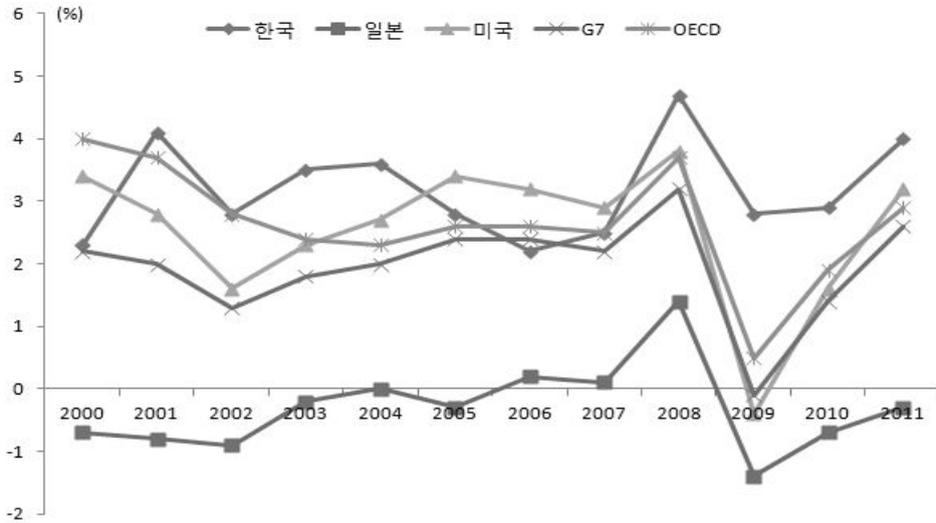
I. OECD 국가 물가 비교

한국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0년~2011년 기간 중 3.2%로써 전체 OECD 평균인 2.7%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서 2011년까지 G7 선진국의 물가 상승률도 2.0%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1년에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11월, 12월 연속으로 4.2%를 기록하여 연간으로 4.0%를 기록했다.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터키(6.5%), 에스토니아(5.0%), 영국(4.5%), 폴란드(4.2%)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08년 이후 G7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1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6%(속보치)를 기록하여 2011년 연간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하였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격차는 2008년 -2.4%p, 2009년 -2.5%, 2010년 3.2%p,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University of Utah, USA.
-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 연구위원
- 미시적인 물가 대응책 - 물가 요인의 상호 상승작용 확대(2011년), 소득 계층별 체감 물가 괴리(2011년)

2011년 -0.4%p로 2010년을 제외하고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여 서민 체감경기 악화를 반증하고 있다.



주 :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자료 : OECD; IMF.

[그림 1]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및 국가간 비교 (2000~2011)

II. 국내 고물가의 주요 배경

소비자물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선진국에 비해 식품물가와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2000년 이후 OECD 국가들의 소비자물가와 비교할 때 한국은 식품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큰 반면, 에너지물가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00년에서 2011년 기간 중 식품물가지수의 평균 상승률은 4.7%로서 OECD 평균 2.9%, G7 평균 2.2%를 크게 상회한다. 근원물가의 평균 상승률도 2.7%로써 OECD 평균인 2.2%를 상회하였으며, G7 국가들의 1.5%보다 1.2%p 가량 높은 수준이다. 반면, 2000년에서 2011년까지의 에너지물가지수는 평균 5.2%로 일본과 프랑스를 제외한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표 1> OECD 주요 국가 물가 비교 (2000~2011년 평균)

(단위 : %)

국가	소비자물가	물가 상승률		
		에너지물가	식품물가	근원물가
OECD 전체	2.7	6.7	2.9	2.2
G7	2.0	6.2	2.2	1.5
미 국	2.5	7.7	2.7	2.0
영 국	2.2	6.6	3.2	1.6
프 랑 스	1.7	4.6	2.0	1.4
독 일	1.6	5.7	1.6	1.2
일 본	-0.3	1.7	-0.1	-0.5
한 국	3.2	5.2	4.7	2.7

주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자료 : OECD

2. 식품물가

소비자들이 주로 애용하는 식품들을 비교해 보면 한국 가격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은 OECD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돼지고기 가격은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 돼지고기 가격 G7 평균 가격 대비 3배 정도 비싼 수준이다. 국내 소고기 가격도 G7 평균 가격 대비 3배 이상 비싸고 닭고기는 1.4배 이상 비싼 수준이다. 또한 오렌지 등 과일 가격과 맥주 등 음료 가격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국내 바나나 가격을 보면 비교 국가 중 가장 높고 G7 평균 대비 2배 이상 비싸다. 국내 오렌지 가격은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고 G7 평균 가격 대비 1.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국내 맥주, 커피, 스타크 가격도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 맥주의 경우 G7 평균 가격 대비 1.8배 이상, 커피 가격은 1.5배 이상, 스낵은 1.4배 이상 비싼 수준이다.

<표 2> 2009년 OECD 주요국 식료품 가격지수 비교

(단위 : p)

국 가	소고기	돼지	닭고기	오렌지	바나나	맥주	커피	스낵
미 국	14	22	49	69	29	44	68	54
영 국	28	43	90	52	25	67	61	68
프 랑 스	23	29	110	55	39	34	80	63
독 일	10	35	56	46	47	54	68	64
이탈리아	15	23	58	53	57	44	—	86
캐 나 다	12	29	81	49	41	72	51	75
일 본	123	55	39	131	89	66	57	70
G7	32	34	69	65	47	54	64	69
한 국	100							

주 : 1) 주요국의 구매력지수(PPP)를 기준으로 한국 100을 기준으로 한 상대물가임

2) 커피, 스낵, 맥주는 2007년 가격임.

자료 : 한국소비자원.

3. 근원물가

근원물가(소비자물가 중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교육비와 주거비 상승률이 근원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근원물가는 주거, 외식·숙박, 교육, 교통, 보건의료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 근원물가 상승률을 살펴보았을 때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높은 상승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2.6%로써 G7평균 1.5%와 OECD평균 2.3%를 상회한다. 2000년 초반에는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2008년에는 OECD 34개국 중 10위, 2010년에는 12위를 기록하면서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다. 이렇게 근원물가가 높은 것은 근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교육비, 주거비 상승률이 크기 때문이다. 가계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기준 교육비는 13.27%, 주거비는 10.04% 이다.

<표 3> 근원물가 상승률 추이

	한국	일본	미국	G7	OECD
2000	1.8	-0.5	2.4	1.5	3.5
2001	3.5	-0.9	2.7	1.8	3.4
2002	3.1	-0.7	2.3	1.8	3.1
2003	3.2	-0.3	1.5	1.3	2.0
2004	2.4	-0.4	1.8	1.4	1.8
2005	2.1	-0.3	2.2	1.6	1.9
2006	2.0	-0.4	2.5	1.7	1.9
2007	2.5	-0.2	2.3	1.8	2.1
2008	3.6	0.1	2.3	1.8	2.2
2009	3.0	-0.6	1.7	1.4	1.7
2010	1.9	-1.2	1.0	0.9	1.3
평균	2.6	-0.5	2.1	1.5	2.3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OECD.

근원물가 중 교육비를 보면, 전체 교육기관에 대한 총지출이 주요국 대비 높고 특히 민간부문 지출 비중이 매우 높다. 총지출은 GDP 대비 7.0%로 G7 평균 4.6%, OECD 평균 5.7% 각각 2.4%p, 1.3%p 높다. 민간부문 지출은 GDP 대비 2.8%로 G7국가 평균 1.4%, OECD 국가 평을 각각 1.4%p, 1.9%p 상회한다. 반면, 정부 지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표 4> OECD 주요국가 공교육비 부담 비율

(단위 : GDP 대비 %)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전체		
	정부	민간	전체	정부	민간	전체	정부	민간	전체
한국	3.1	0.8	4.0	0.6	1.9	2.4	4.2	2.8	7.0
미국	3.7	0.3	4.0	1.0	2.1	3.1	5.0	2.6	7.6
일본	2.5	0.3	2.8	0.5	1.0	1.5	3.3	1.6	4.9
프랑스	3.7	0.2	3.9	1.2	0.2	1.4	5.5	0.4	6.0
독일	2.6	0.4	3.0	0.9	0.2	1.1	4.0	0.7	4.7
이탈리아	3.0	0.1	3.1	0.6	0.3	0.9	4.1	0.4	4.5
영국	4.1	0.1	4.2	0.7	0.6	1.3	5.2	0.6	5.8
캐나다	3.1	0.4	3.5	1.5	1.1	2.6	4.6	1.5	6.1
G7	3.2	0.3	3.5	0.9	0.9	2.0	4.5	1.1	4.6
OECD	3.3	0.3	3.6	1.0	0.5	1.5	4.8	0.9	5.7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September 2010.

아파트임대료 등 주거비가 OECD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 기록하고 있다. 한국 아파트임대료는 OECD 국가 중에는 미국(전체 2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전체로도 4위 수준을 기록한다. 한국 사무실임대료는 OECD 국가 중에는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전체로는 11번째 수준이다.

<표 5> 주요국 주거비 비교

순위	아파트임대료		사무실임대료	
	국가	임대료(\$)	국가	임대료(\$)
1	홍콩	4,066	일본	1,673
2	미국	3,122	러시아	1,416
3	싱가포르	2,942	홍콩	1,145
4	한국	2,602	영국	1,022
5	카타르	2,288	룩셈부르크	954
6	벨기에	2,288	브라질	912
7	아일랜드	2,157	베네수엘라	879
8	영국	2,144	인도	876
9	베네수엘라	2,079	아일랜드	875
10	러시아	2,079	스위스	874
기타	일본(13위)	1,791	한국(11위)	835
	중국(34위)	994	미국(25위)	491
	-	-	중국(26위)	489

주 : 1) 아파트임대료는 방 3개 아파트의 2009년 월세 기준임.
 2) 사무실임대료는 2009년 제곱미터당 가격 기준임.
 3) 아파트임대료, 사무실 임대료는 총 55개 국가 대상임.
 4) OECD 국가는 미국, 한국, 벨기에 아일랜드, 영국, 일본,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 34개임.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 book 2010.

4. 에너지 물가

하지만, 높은 원유수입의존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물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가격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휘발유는 2007~2009년까지의 평균 가격이 0.68달러(리터당, 세전 기준)로 미국 0.61달러보다는 높았지만, 일본 0.74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기료는 0.09달러(킬로와트당)로서 미국 0.11달러, 프랑스 0.16달러보다 낮았으며 영국 0.22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용 석탄의 경우 94.3

달러(톤당)로 미국과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천연가스는 644.0달러 (107kcal GCV당)로 영국과 프랑스 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표 6> OECD 주요국 평균 에너지 가격 (2007~2009년)

국가	휘발유(\$/L)	디젤(\$/L)	석탄(\$/t)	천연가스 (\$/107Kcal GCV)	전기(\$/KWh)
미국	0.61	0.67	94.3	531.8	0.11
영국	-	0.72	108.6	795.7	0.22
프랑스	-	0.73	179.1	844.6	0.16
독일	0.67	0.76	99.1	-	-
일본	0.74	0.80	108.6	-	-
한국	0.68	0.73	94.3	644.0	0.09

주 : 1) 휘발유, 디젤은 세전 가격기준이며, 나머지는 세금 포함된 최종 가격임
 2) 석탄은 산업용 기준이며, 프랑스는 발전용 기준.
 3) 천연가스와 전기는 가정용 기준.
 자료 : IEA, Energy Prices & Taxes.(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KESIS) DB 재인용)

III. 정책적 시사점

OECE 국가 중 국내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국내 에너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식품물가, 교육비, 주거비 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품물가, 교육비, 그리고 주거비 안정화 서비스요금의 점진적 조정 등이 필요하다.

첫째, 식료품 등 필수품에 대한 가격 안정화가 요구된다. 식료품 등 가계 생필품에 대한 유통구조 효율화, 가격 모니터 강화 등을 통해 가격 상승폭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의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인 할당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수입 물량을 원활히 조절해야 한다. 둘째, 교육비 안정화가 절실하다. 선진국에 비해 높은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공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주거비 부담 완화다.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복지 정책 마련과 공공 임대 주택 및 장기 전세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서비스요금의 점진적인 인상이다. 서비스요금을 품목별·기간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일시적인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 **SDI**